

정상 개원 첫 국회부터 ‘입법전쟁’

민주 “일하는 국회법 이달 중 마무리할 것”
통합 “독선적 경제정책 민생·경제 어려워”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일하는 국회법’을,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 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월 국회 중 전날 제

출한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어제 제출했고, 7월 국회 중 일하는 국회법을 마무리하고 후속법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치를 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만

들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전날 개원식에 합의한 것에 대해 “야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 들어와 생산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늦게나마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국회에 들어온다고 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활성·민생활력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주택법 등 10대 종합 법안을 7월 국회 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이날 언급한 10대 법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안심·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북한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지난 14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줌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여야의 입법 갈등은 7월 국회를 시작으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비판여론에 떠밀린’ 이해찬 “사과… 진상조사는 어려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확인된 지난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시장을 두고 “오랜 친구다. 충격적이고 애석하다”며 애도했다.

박 시장에게 제기된 성추문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불편한 심기는 같은 날 민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취재자가 성추문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묻자 ‘XX자식’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자리에서도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피해자에 대한 이 대표의 공개 사과는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5일 오전에야 이뤄졌다. 이를 전인 13일 대변인을 통해 ‘간접 사과’ 했으나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이 두 분이 사임했다”면서 “당 대표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한 번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했다. 그는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선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면서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했다.

그간 이 대표를 비롯해 여성 운동으로 이름을 알렸던 당내 여성 의원들마저 긴 침묵을 지켰다.

그 배경에 ‘유족의 심정을 배려해 최소한 주모의 기간을 지켜달라’는 명분을 세웠으나, 당에서 주도한 주모열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점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사적인 주모’를 떠나 공당의 대표로서의 책임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권력형 성범죄’로 의원직 사퇴 또는 국단적인 선택을 한 광역단체장만 박 시장을 비롯해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등 3명에 달한다. 그때마다 당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선 거듭되는 권력형 성범죄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 제명으로 사태를 축소하는 점에 그친 민주당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박 시장에 대해 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이 대표는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고 말해 책임 논란에서 빚겨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사과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공감대가 결여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87년 이후 가장 늦어

그린뉴딜 현장방문 연기하고 여의도로…국회협조 무엇보다 중요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판단해 현장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려 기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6월 29일쯤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등의 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국민보고대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최장 지각’ 개원식으로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기록으로 남게 됐다.

이전까지는 18대 국회 때였던 2008년 7월 1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총선에 참패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지연돼 개원식도 늦어졌다.

강 대변인은 ‘국회’ 일기 시작 48 일 만이고,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최장 지각’ 국회 개원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국회를 형한 문 대통령의 발길을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개원연설



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문 분량은 3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로 최고의 상품”



안철수(왼쪽), 이준석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5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고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은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에 안 대표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분이 ‘안 대표의’ 출마가 어때’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국회의원은 아니고 최측근 인사”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이고 국민의당이 처한 현실에서 봤을 때 안 대표가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대선 때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전 보궐선거에서 역할을 해 좋은 성과가 난다면 국민의당 전체 분위기가 살 것이라는 취지로 답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본다”며 “사실 통합당 내에서 이런 저런 분들이 거론되지만, 친신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조금씩 흡집이 나 있는 분들이라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공조 하에 안 대표 카드가 떠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